

# 공수부대 '12·3 계엄' 때 탄약 18만 발 불출했다

〈拂出〉

### 내란국조특위, 국회 출동 5만 발·선관위 등 출동 등 13만 발 불출 확인 707부대 개인 휴대 탄약 780발...“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탄약 약 13만 발을 탄약고에서 불출(拂出)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1공수여단에 5만 여발이 불출됐던 점을 고려하면, 계엄작전에 투입된 특전사가 불출한 탄약은 18만발 이상이 된다.

14일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육군특수전사령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3공수특전여단(3공수여단)은 4만3260발, 제9공수특전여단(9공수여단)은 8만8127발을 탄약고에서 작전부대로 인계했다.

3공수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으로, 9공수여단은 중앙선거위 관악청사와 여른조사업체 '여른조사 꽃' 등으로 불출했다.

이제까지는 국회에 출동한 1공수여단으로 불출된 탄약 규모만 알려졌다, 3공수·9공수여단의 경우 정확한 불출 탄약 규모 등이 알려지지 않았다.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이 실제 선관위로 가져간 탄약은 각각 1만4140발과 3만2388발로, 전체 불출 탄약의 약 32.6%, 36.7% 수준이었다.

계엄 당시 3공수여단은 선관위 투입 병력에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약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했고, 실탄을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째로 봉인해 보관했다.

9공수여단의 경우 단독 군장을 한 선발대 118명이 먼저 중앙선거위 관악청사로 출동했으며, 후발대 22명에게 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을 2.5t 트럭에 싣고 따라오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에 투입됐던 1공수여단은 탄약 5만400발을 탄약고에서 차량 적재 상태로 준비했으며, 실제 탄약고에서 꺼낸 탄약은 562발이었다.

1공수여단은 투입 당시 특임대 상황실 간이 탄약고에 상시 보관된 탄약 2943발을 더해 총 3505발을 가지고 출동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내부

로 진입한 707특수임무단은 6040발을 탄약고에서 불출받았으며, 특전사 부대 중 유일하게 개인 휴대 탄약 780발을 지급받았다.

민 의원은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들이 투입 당시 준비한 탄약이 18만8000여 발, 거의 20만발에 달한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전쟁'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복군 특전사령관에게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중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측 소추위원(아래 왼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아래 오른쪽) 등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 헌재, 탄핵 심판에 속도 낸다

### 尹 불출석에 첫 변론 바로 종료...“형사법정 아냐” 16일 2차 변론 출석 없어도 절차 진행

14일 열린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헌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고 4분 만에 첫 변론 기일을 끝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하지만,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는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전날(13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과 이변 탄

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분(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정 재판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냈으며,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정 재판관은 201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

직 시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예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재판을 맡았는데, 이때도 피고인 측에서 정 재판관이 황 변호사와 부부 관계라는 점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낸 적이 있다.

헌재가 이제까지 재판관 관련 당사자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

문 대행은 이번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3항, 현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개시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기각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정상적으로 변론을 개최함으로써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연합뉴스

##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여당이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부담 3년 연장 및 부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정된 자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에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지난달 31일 쌍륙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까지 3건이 됐다.

최 권한대행은 교육부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AI 교과서 자료 규정법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돼 재의요구 시한은 25일까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